

## 충남 미래 농정과제 도출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본 연구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충남 농정의 중장기 미래 현안 중점사업을 도출하는 데 있음

###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3. 미래 농정과제 사례 분석
4. 충남도 미래농정 과제

### 요약

- 본 과제는 최근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분석해 충남도 미래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농업농촌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기후위기), 석유에너지의 고갈과 대체에너지, 그린뉴딜과 일자리, 농업인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이 중요 이슈화 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불평등의 확대, 고령화와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과 첨단농업기술 등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미래농정 과제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충남도 미래농정의 방향: 1) 생명을 살리는 생태문명건설로 전환, 2) 농업인과 소비자 간 사회신뢰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성 보장,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체계 구축, 4)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합리적 영농체계 구축, 5) 미래 영농세대의 육성과 통일시대의 농업교류 실현
- 충남도 미래농정의 세부 과제: 1)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보장, 2)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3) 농지제도의 원칙성 명확화, 4) 친환경농산물의 공적 소비 확대, 5)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합리적 영농방식 구축, 6)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자립 확대, 7) 돌봄과 나눔을 통한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8) 미래 영농세대 육성 및 통일농업 준비

##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충남도는 민선5·6기 3농혁신과 민선7기 3농정책을 통해 미래 농정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충남도를 대표할 만한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 충남도는 민선5·6기에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사업>, <3농혁신 2030발전계획 연구> 등을 통해 충남도 미래 농정을 준비해 왔음. 또한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3농정책을 통해 충남농정 100대 시책 사업을 도출하고 시행해 왔음
  -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충남도의 대표적인 미래농정 사업 발굴은 미흡한 상태임
- 현재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기술변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에너지 등
  - 환경변화: 기후변화(기후위기), 자연재해, 이상기온, 지속성 등
  - 인구변화: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소멸 등
  - 인식변화: 공정, 불평등, 안전, 신뢰, 소확행, 워라벨, 등
-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미래농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충남도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는 농민수당제·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예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미래농정 시책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미래농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02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 1. 대외적 여건 변화

#### 1) 기후위기 악화

##### ○ 기후위기는 모든 생명과 자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기후는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와 같이 기후위기가 지속된다면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
- IPCC SR15와 SROCC에 의하면, 2030년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2030년에는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기온 상승이 지속된다면 인류는 파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
- 따라서 과학자, 환경론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기존 배출 이산화탄소로 인해 기후변화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

-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로 감소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흡인된 이산화탄소의 양 때문에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와 무역구조, 산업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그나마 남은 석유 등 화석연료 자원의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파국은 견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 화석연료 및 에너지 고갈

##### ○ 석유자원의 고갈 위기 직면

- 오늘날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석유기반의 산업시스템은 석유자원의 고갈로 점점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그 가운데 석유제품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유자원의 고갈은 미래 한국 수출에도 큰 위험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가운데 석유제품은 2위로 비중이 높음<sup>1)</sup>

##### ○ 셰일오일가스 등 기존 화석 에너지 개발 한계 직면

- 미국 등에서는 대체에너지로 셰일가스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오염과 지진유발의 부작용으로 지속적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현대적 농업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석유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대부분의 농자재와 영농방식이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석유자원에 의한 산업화된 영농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생태문명을 토대로 한 새로운 차원의 영농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3) 그린뉴딜의 등장과 한계<sup>2)</sup>

##### ○ 화석연료 기반의 근대적 산업경제시스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뉴딜 제기

-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현재 석유자원을 활용한 산업경제시스템은 효율성은 높지만 기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임

##### ○ 그린 뉴딜의 핵심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임

-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에너지를 위해서는 태양광, 수력, 풍력, 지력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이 적극 필요하다는 것임
- 이들 재생에너지는 현재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보다 에너지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수지 비율(EROEI)이 증가해 이익이며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일자리 등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임

##### ○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산업경제시스템 하에서 그린 뉴딜사업 또한 한계가 분명

- 그린 뉴딜에 비판적인 입장은 현재와 같은 고투입과 고비용, 경쟁과 효율 중심의 산업경제시스템 하에

1) 참고로 우리나라 제1위의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컴퓨터, 정보통신기기와 그 부품 등임(녹색평론, 2020년 1-2월)

2) 김종철(2020), "기후위기, EROEI, 농민기본소득", 녹색평론1-2호.

서는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선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을 자연순환적인 생태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핵심은 근대적 방식의 산업농업에서 생태적 농업을 통한 소농과 공동체의 복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4) 농민의 권리 보장 강화

##### ○ 유엔인권위원회의 <농민권리선언> 마련

- 유엔인권위원회는 전 세계 농민(소농)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La Via Campesina)의 농민권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농민권리를 논의함
- 유엔인권위원회는 비아 캠페시나가 만든 <농민권리선언> 안을 받아들여 논의한 끝에 2013년 처음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정식명칭: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발표함

##### ○ 유엔총회의 <농민권리선언> 채택

- 유엔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5차례의 다년간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논의된 <농민권리선언>에 대해 2018년 12월 최종 채택함
- 우리나라는 <농민권리선언> 내용 가운데 종자권 등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권함.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만큼 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총 27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농민의 정의, 제2장 국가의 일반 의무, 제27장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농민의 권리를 규정함. 구체적인 권리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1] 유엔 <농민권리선언> 세부 내용

1)~14)조	15)~27)조
1)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15)식량과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2)국가의 일반 의무	16)적절한 소득과 생계 및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3)평등과 비차별	17)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4)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	18)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5)천연자원권과 발전권	19)종자에 대한 권리
6)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20)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7)이동의 자유	21)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8)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22)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9)결사의 자유,	23)건강에 대한 권리
10)참여의 권리	24)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1)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권	25)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12)정의에 대한 접근	26)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3)일할 권리	27)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14)일터에서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권리,	

자료 : 박경철(2019).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후 우리의 과제, (가칭)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발족식 발표 자료.

## 2. 대내적 여건 변화

### 1) 불평등 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고조

#### ○ 경제적 불평등 심각

-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적은 없었음
-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부자 1% 부자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초부유층(super-rich)들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적 성장도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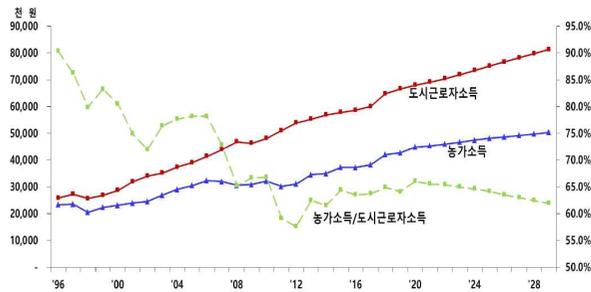
\* 참고: 옥스팜불평등 보고서(뉴스1 2020년 1월 20일자 보도)

- 1) 전 세계 2153명의 억만장자들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 소유
- 2) 22명의 부호들이 아프리카 모든 여성보다 많은 부 축적
- 3) 전 세계 상위 1% 부호들이 69억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부 소유
- 4) 무급 돌봄노동(unpaid care work)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여성들의 임금은 연간 10조8000억 달러 이상
- 5) 억만장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

⇒ 옥스팜 불평등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공공 서비스 감축으로 추가적인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아동 및 의료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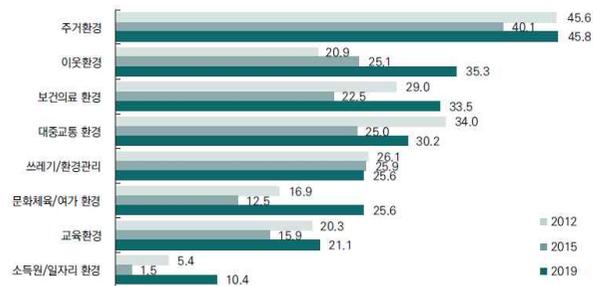
○ 전 세계적, 전 국가적 불평등 현상은 농업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2019년 64.1%이고 2029년에는 61.9%로 연평균 0.2%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도농 간 소득격차 이외 사회, 문화, 의료, 교육, 교통, 환경 등의 격차를 감안하면 그 격차는 훨씬 심각하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도농 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사항에서도 격차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그 중에서도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한 만큼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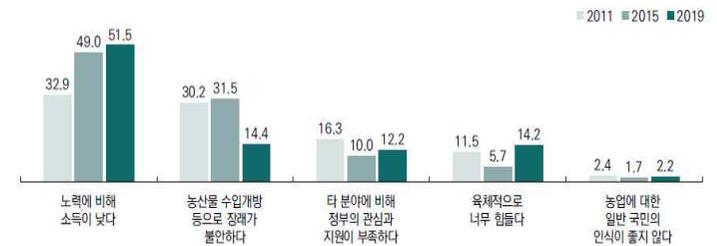


<그림 2>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

자료: 이정민 등. 2019년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85호

○ 농업인의 직업적 불만족도 소득의 영향이 가장 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중 첫 번째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점임.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임
-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개방농정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의 하락이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해 농업인의 미래 또한 불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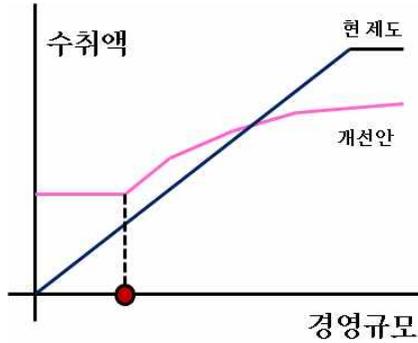


<그림 3>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자료: 이정민 등. 2019년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85호

○ 공익적 가치와 소농 보호를 중시하는 직불제 실시

- 정부는 기존의 면적단위 농업직불제가 농가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농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농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2020년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할 예정임
-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쌀고정직불을 기본형 직불로 통합하고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직불은 가산형 직불로 통합하는 것임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0.5ha(40만 농가, 농가의 약 30%) 미만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게는 최소 1ha당 200만 원의 직불금을 보장한다는 계획임
- 공익형 직불제는 논밭 구분 없이 지급하되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간 단가의 차이를 두며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무이행조건을 부여할 계획임



<그림 4>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자료: 박경철(2019),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발표 자료

[표 2] 농업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임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해 소수가 혜택을 받는 기존의 농정체에서 벗어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영농형태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 삶을 보장받고 농업과 농촌사회가 유지되

는 새로운 차원의 농업·농촌 정책임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2018년 강진군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사업, 2019년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으로 시작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며 현재에는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음
- 2020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계획대로 지급된다면 전국 농가의 57.8%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함<sup>3)</sup>

[표 3] 2020년 전국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정 현황

구분	명칭	지급액	대상	예산액	시행 시기
경기	농민기본소득	농민 1명당 월 5만원	농민 9만1천여명 (6만3천여 농가)	275억	2020년 하반기 경기도내 참여 희망 6개 시군 우선 시행
경기	농촌기본소득	농민 1명당 연간 50만원	1개면 시범지정 (농민 3천~5천명)	105억	2020년 하반기 시범 시행
충남	농어민수당 (농민수당)	농가당 월 5만원 (농가당 월 10만원)	16만5천여 농가 (7만여 농가)	990억	2020년 시행
충북	농민수당	농가당 월 5만원	10만2천여 농가	613억	2020년 시행
전북	농민공익수당	농가당 연간 60만원	24만3천여 농가	1459억	2020년 시행
전남	농어민수당 (농민수당)	농가당 월 5만원	(6천여 농가)		2020년 시행 계획 수립중
강원	농민수당	농가당 월 5만원	6천여 농가	30억	2020년 시행
경북 청송	농민수당	농가당 연간 50만원	6천여 농가	33억	2019년 시행
경북 봉화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농가당 연간 50만원	6600여 농가		2020년 시행
경남	농민수당	(농민 1명당 월 20만원 이내)	(5만여 농가)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제주	농민수당	(농가당 월 10만원)	(3만7천여 농가)		주민 발의 조례안 준비중

전국 시도 집계 \*인원은 준비 또는 계획중

자료: 한겨레신문 2020년 1월 3일자 보도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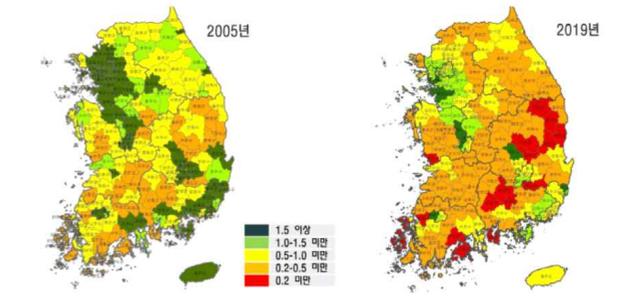
- 충남도도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실시할 예정임. 충남도는 2017년부터 농가당 37만 원을 지급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으로 개편해 액수도 농가당 60~8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지급 액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별지급임. 현재의 농민수당은 농가지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내 여성농민, 청년농민 등이 소외될 수 있음
- 경기도는 2020년부터 여주시, 포천시 등 도내 4개 시군 지자체를 시작으로 농민 개별 지급의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임

3) 한겨레신문 2020년 1월 3일자 보도 내용

## 2)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초로 국가소멸 위험의 인구감소 위기 국가임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228개 중 100곳 이상이 소멸위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5> 지역소멸 위험도 변화(2005/20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과소고령화로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

-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대 1.082만 명에 달하였으나 2018년 기준 231만 명으로 약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을 보면, 1980년에는 6.7%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44.7%에 달함.



<그림 6>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이수행 외(201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2020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9년까지 10년 동안 농가호수는 100.9만 호에서 93.0만 호로 7.8% 감소하고, 농가인구는 227.8만 명에서 191.5만 명으로 15.9% 감소를 전망함
- 또한,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45.5%에서 55.7%로 10.2% 증가하고,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4.4%에서 3.6%로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4]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구분	1999	2019(추정)	2020(전망)	2029(전망)	비고 (2019-2029)
농가호수(만 호)	138.2	100.9	100.1	93.0	7.8% 감소
농가인구(만 명)	421.0	227.8	224.3	191.5	15.9% 감소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21.1	45.5	46.2	55.7	10.2% 증가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9.0	4.4	4.3	3.6	0.8% 감소
농림어업취업자(만 명)	234.9	139.5	140.9	140.5	0.7% 증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

○ 충남도도 이미 인구감소 단계에 진입함

- 충남도는 본래 2045년(충남연구원 발표, 2019)<sup>4)</sup> 232만 6000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감소는 충남도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음
- 하지만 2019년 인구통계 결과 충남도는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 말 기준 충남도의 인구는 전년 대비 1980명이 감소함

○ 지역소멸의 근본적 이유는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

-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 등 노동가능 연령층의 지역 내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지역으로 몰려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청년 등 노동가능 연령에 대한 일자리 창출,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함

4) 통계청에서는 충남도 인구감소 시점을 2039년으로 예측함

### 3) 친환경농산물 공적 조달 확대

####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대

- 최근 국내외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적조달이 확대되고 있음
- 안전한 농산물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공공재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푸드플랜(먹거리계획)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 문재인 정부는 푸드플랜을 농정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함

- 최근 임산부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일명 꾸러미사업)이 실시되면서 친환경농산물생산자와 임산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안전한 먹거리는 먹거리 정의 차원에서 확대 공급이 필요

- 안전한 먹거리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 추구에 필수조건인 만큼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중에서도 특히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표 5] 37개 기초지자체 지역 먹거리 전략 추진현황

시군	유형	추진년도	시군	유형	추진년도
경기 수원시	도시형	2019	경북 구미시	복합형	2019
경기 시흥시*	도시형	2019	경북 안동시	복합형	2019
경기 광주시	복합형	2019	경북 상주시	복합형	2018
경기 용인시	복합형	2019	경남 김해시	복합형	2019
경기 평택시	복합형	2019	경남 진주시	복합형	2019
경기 화성시*	복합형	2019	경남 거창군	농촌형	2019
경기 이천시	복합형	2017	전북 부안군	농촌형	2019
경기 포천시	농촌형	2019	전북 김제시	농촌형	2019
강원 춘천시	복합형	2018	전북 익산시	농촌형	2019
강원 평창군*	농촌형	2019	전북 완주군	복합형	2018
충남 당진시*	복합형	2019	전북 전주시*	복합형	2015
충남 아산시*	복합형	2019	전남 나주시	복합형	2018
충남 부여군	농촌형	2019	전남 순천시	복합형	2019
충남 서산시	농촌형	2018	전남 담양군	농촌형	2019
충남 청양군	농촌형	2018	전남 장성군	농촌형	2019
충남 홍성군*	농촌형	2018	전남 해남군	농촌형	2018
충북 옥천군*	농촌형	2017	대전 대덕구	도시형	2019
충북 괴산군	농촌형	2019	대전 유성구	도시형	2018
			서울 서대문구	도시형	2018

주: \*는 자체 수립, 농촌형15, 복합형 17, 도시형 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19), 황영모(2019).

- 2020년 2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기관이 기존의 공공기관, 농어업단체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로 확대됨

### 3. 농업농촌의 트렌드 변화

#### 1)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전망

- 전 세계는 향후 기후변화, 자원고갈, 일자리 부족, 의료비 지출 증가, 아시아의 시대 도래, GDP 지표의 한계 등에 공통된 인식을 가질 것으로 전망함
  - 유엔 및 전 세계 미래학자들은 향후 10년 내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인식을 가짐: 세계 인구 과다, 자원고갈, 환경오염 통제 불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인식 확산, 일자리 부족, 여성 교육 향상, 기술 발전, 태양광 에너지 활용 확대, 청년 연장, 의료비 지출 확대, 아시아 시대 도래, GDP 성장의 한계
  - 또한 미래를 통찰하는 핵심 주제로 신뢰, 프라이버시, 불평등, 투명성, 정체성을 제시함
-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향후 10~30년 동안 주된 일자리 변화 요인으로는 로봇노동자의 확대 등 7가지 요인을 제시했고 2059년 석유시대의 종말을 전망함
  -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혁명의 주요 요인으로 로봇노동자의 확대, 무인차의 확대, AI로봇의 일상화, 디지털화된 코인경제 등장, 증강현실 잠재력 증가, 노화관련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 발전, 안보-테러방지기술 발전 등을 지적함
  - 향후 10년~30년 동안 기후변화, 인도의 부상, 우주시대 도래, 실업자 증가, 석유시대의 종말을 전망함

[표 6] 미래에 대한 인식과 전망

미래예측2030: 미래에 대한 12가지 공통 인식	미래예측2030: 미래를 통찰하는 핵심 주제	일자리혁명 2030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1.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2.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3. 환경오염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4.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5. 일자리가 부족하다. 6. 여성 교육의 향상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7. 기술 발전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8. 해답은 태양광 에너지에 있다. 9. 청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0.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11.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 12. GDP 성장의 사회 발전을 평가하는 최적의 기준인가?	1. 신뢰 (Trust) 2. 프라이버시 (Privacy) 3. 불평등 (Inequality) 4. 투명성 (Transparency) 5. 정체성 (Identity)	1. 로봇과 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노동자의 탄생(2025년 로봇이 전체 생산의 50% 담당) 2. 도시의 지형을 바꾸는 자율주행 무인차 확대(2030년 95% 사람들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3. 인공지능 AI로봇이 미래의 일상을 함께 함(15년 내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인공지능으로 대체) 4. 디지털화된 코인경제 등장(디지털 가상화폐가 일상의 지불수단으로 대체) 5. 증강현실이 미래의 잠재력이 됨(사물인터넷, 머신 러닝과 융합) 6.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 주목(수명 연장으로 인한 신산업 주목) 7. 안보, 테러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테러리스트 방지 산업 부상)	2026년 지상낙원 몰디브 휴양여행 불가(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2040년 세계 최고 강국 인도(2030년 인구 15억의 인도가 최고의 경제성장) 2033년 본격 우주시대 개막 2050년 둘 중 한명은 실업자(인공지능으로 현존하는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 대체) 2059년 석유의 종말(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그리드패리티를 맞아 비싼 석유의 수요가 사라짐)

자료 : 표 상단의 각 미래보고서

### 2)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 농업-농촌 메가트렌드의 키워드는 장수, 무한경쟁, 녹색산업, 융복합기술, 문화창조임
  - 김정호 등(2010)은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를 고령화 사회(장수시대), 글로벌 경제(무한경쟁시대),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녹색산업시대), 과학기술 발전(융복합기술시대), 새로운 가치 지향(문화창조시대) 등 5대 트렌드를 제시함
  - 이와 아울러 각 트렌드별 전망과 특징을 제시하고 이러한 트렌드가 농업과 농촌에 어떠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함

[표 7]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의 파급 영향
고령화 사회 (장수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인구증가를 둔화, 평균 수명연장</li> <li>·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li> <li>· 건강, 장수에 대한 니즈</li> <li>· 노인복지 수요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li> <li>·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li> <li>·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li> <li>· 청장년 전업농의 주력 형성</li> </ul>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진전,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 합경제권 등으로 발전</li> <li>· 미국 중심의 세계화, 탈피, 전 지구적 시장경제 출현</li> <li>· 20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li> <li>·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li> <li>·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li> <li>·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li> </ul>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 (녹색산업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온난화로 2050년 기온 2°C 상승, 강수량 8% 가량 증가</li> <li>·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li> <li>·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 과일 재배</li> <li>·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li> <li>·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농업) 등 확산</li> <li>·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li> </ul>
과학기술 발전 (융복합기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BEC 기술의 보편화, 융합화</li> <li>·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li> <li>· 로봇 상용화로 2025년 노동시장 50% 교체</li> <li>· 우주시대 본격화, 원격탐사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li> <li>·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li> <li>·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li> <li>·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li> </ul>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에서 탈피, 삶의 질 중시</li> <li>· 개성, 집단지성</li> <li>· 여가 및 문화 가치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li> <li>· 농촌에메리트 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li> <li>· 귀농귀촌 인구 증가</li> </ul>

자료 : 김정호 외(2010). 농업-농촌 2030-20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농업농촌의 분야별 미래상

- 김정호 외(2010)는 2050년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농업경영, 농산물 소비·유통, 농촌공간생활 분야로 나눠 제시함
  - 농업경영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분업체계 형성을 통한 첨단 원예기술 활동, 출퇴근하는 '신농업인'인 등 장, 중농층은 소량다품목 생산과 친환경 관광농업 활성화, 식품공장과 로봇농업의 보편화를 전망함

- 농산물 소비·유통 분야에서는 건강·장수시대의 도래로 인한 자연식 지향 확대, 전자상거래 비중 증가, 외식이 증가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신선 식자재 시장의 성장을 전망함
- 농촌공간·생활 분야에서는 도농 간 경제 상실, 다양한 주거문화 등장, 중산간지역의 인구감소 심화, 유비쿼터스기술을 통한 의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전망함

[표 8] 2050년 농업·농촌의 미래상

분야	주요 특징	주요 지표
농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농업과의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한국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원예경영에 특화</li> <li>· 국민소득 8만 달러에 상응하는 전문농업경영체 성립, 농장에 출퇴근 영농하는 '신농업인' 등장</li> <li>· 중농층은 소량다품목 생산체제, 친환경 관광농업으로 도농 교류 참여</li> <li>· 첨단기술농업(식물공장, 로봇농업 등) 보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농업인 20만 명</li> <li>· 전업농 농업소득 2억원(경영규모: 벼농사 30ha, 과수원 6ha, 한우 150두)</li> </ul>
농산물 소비·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장수시대: 웰빙, 로하스, 자연식 지향</li> <li>· 유통혁명: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이버마켓(전자상거래) 비중 증가</li> <li>· 식품산업의 성장: 외식, 중식 등의 증가, 신선 식자재 시장의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비중 30%(GAP, HACCP 정착)</li> <li>· 신선 식자재 시장규모 20조 원</li> </ul>
농촌공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 진전으로 2020년경부터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 대한 의미가 거의 상실</li> <li>· 전원생활을 위한 신정주공간, 다양한 주거문화 형성</li> <li>· 중산간지역의 인구 유출에 따른 공동화 심화</li> <li>· 유비쿼터스 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율 95%</li> <li>· 농촌인구 비율 15%</li> <li>·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 10%</li> <li>· 농촌관광 비율 50%</li> </ul>

자료 : 김정호 외(2010), 농업·농촌 2030-20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3 미래 농정과제 사례 분석

### 1. 기관별 사례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농정 10대 전략 30대 과제(20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의 비전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함

- 비전: 국민의 행복과 함께 하는 안전한 농식품,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
- 5가지 방향: 1)농정 대상을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확대, 2)가격, 수급, 경쟁력 등 기존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 3)소득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 4)농업·농촌을 분리하여 부문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접근, 5)보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농업·농촌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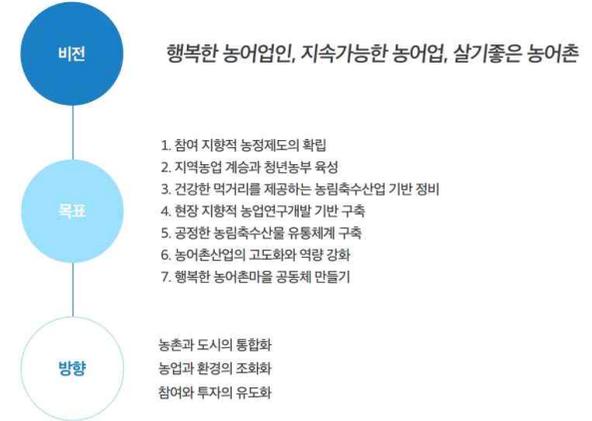
○ 농정의 비전과 방향을 바탕으로 분야별 미래농정 10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제시함

- 미래농정 10대 전략의 키워드는 농식품, 농업·농촌의 가치, 소득안정,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마을 만들기, 지방분권화, 재정집행 효율화, 4차산업혁명, 국제정세 대응 등임
- 30대 과제 중 비교적 최근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적 농업 확대, 소득보전 직불제 확대, 농업·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역공동체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농정의 지방분권화, 신성장 동력산업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등임

[표 9] 미래농정 10대 전략 30대 과제(2017)

10대 전략	30대 과제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 과제 1: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 구축 - 과제 2: 농식품 안전성 확보 - 과제 3: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 기반 유지
②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 과제 4: 농업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 향상 - 과제 5: 사회적 농업 확대 - 과제 6: 풍부한 산림 자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
③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 육성으로 할 맛 나는 농업 실현	- 과제 7: 소득보전은 직불제, 경영안정은 보험 방식으로 대응 - 과제 8: 경영회생 지원 및 재해보험 확충으로 경영 안전망 확보 - 과제 9: 귀농·창농 정책 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 체계화
④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과제 10: 문화교육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과제 11: 농촌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과제 12: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⑤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 과제 13: 맞춤형 농촌 사회복지 및 공공부조 지원 개선 - 과제 14: 농촌형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과제 15: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⑥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 과제 16: 농업생산기반, 정주환경, 경관이 어우러진 농촌계획 - 과제 17: 중심지와 배후 마을이 연계된 쾌적한 공간 정비 - 과제 18: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가 활동 장려
⑦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 과제 19: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배분과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 과제 20: 지방농정 추진 체계의 효율화와 협치 활성화 - 과제 21: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반 강화
⑧ 농업 부문 투자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 효율화	- 과제 22: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 과제 23: 정책 자금 유형별, 농가경영체 성장단계별 지원 전략 차별화 - 과제 24: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비 기반 마련
⑨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 과제 25: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 과제 26: 농식품 R&D 시스템 혁신 - 과제 27: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⑩ 대외 정세 대응역량 강화	- 과제 28: 국제 통상 환경, 기후변화 등의 대응 방안 마련 - 과제 29: 내실 있는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 협력 사업과의 연계로 한국 농업 외연 확대 - 과제 30: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자료 : 이명기 등(2017).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7> 3농혁신 3단계의 비전, 목표, 방향  
자료: 충남도(2018),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p.77 참조.

- 3농혁신 3단계 비전, 목표, 방향을 바탕으로 총 5개 부문, 7개 분야, 25개 핵심전략사업, 64개 사업을 제시함<sup>5)</sup>
  - 5대 부문: 제도혁신, 인력혁신, 먹거리혁신, 유통혁신, 농어촌혁신
  - 7대 분야: 농정제도(1), 농업인력(2), 지역먹거리(3), 농업연구 개발(7), 시장유통(4), 농어촌산업(5), 농어촌마을(6)<sup>6)</sup>

[표 10] 3농혁신 3단계사업(2019~2022)

부문	분야(사업수)	사업(굵은 색 밑줄은 핵심전략사업)
①제도혁신	농정제도(10)	<b>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b> ,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사업, 농정제안 1번지 운영, 농가소득 조사 사업, <b>3농정책 평가 사업</b> , 농업합경실천사업 확대, 충남 농어민교육원 운영, 농정소식 SMS 사업, <b>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확대 개최</b> , <b>남북 농어업교류 활성화 사업</b>
②인력혁신	농업인력(9)	충남 농업인력 종합계획 수립, <b>지역단위 인력농지통합계획 수립</b> , <b>청년농업인 수당제</b> , <b>초보농부 인큐베이션 팜 설치</b> , 농업인력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과정 설치 및 연계, 여성농업인 위상 및 복지 강화, <b>농어촌산업인력지원센터 및 일자리 카페 사업</b> ,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 교육, 여성어업인 육성
③먹거리혁신	지역먹거리	<b>부산물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구축 사업</b> , <b>농업의 다원적 기</b>

5) 이외에도 충남도 15개 시·군별 26개 중점사업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함.  
6) ( )는 중요도의 우선순위임.

2) 충남연구원: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 충남연구원은 충남도 3농혁신 3단계(2019~2022) 추진 계획의 비전, 목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2)	<b>농 보전 특성화 사업,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 활동가 지원 사업, 충남 로컬푸드 소비자 100만 양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사업, Non-GMO 튀김유 생산-유통(가공)-소비 시스템 구축 사업, 질병 없고 건강한 동물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사업, 악취 없는 축산 농장마을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안전한 수산물·수산물가공품 공급체계 구축, 안정적인 연근해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첨단 친환경양식수산물 생산기반 구축</b>
	농업연구개발(7)	<b>농민 참여형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농업연구개발 성과 현장실증사업, 친환경 농업기술 및 우량 신품종 개발, 지역특화작목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빅데이터 구축, 가축질병 및 축산악취 개선방안 연구, 약용작물 중심 그린바이오산업 기반 구축</b>
④유통혁신	시장 유통(10)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의 지속적인 육성, 충남오감 지역자조금 조성, <b>조직화 취약품목에 대한 공동생산출하조직 육성</b> , 충남 원예산지 모델 구축 및 전파, 지역 원예품목의 산지·소비자 유통 체계 구축, <b>지역 농축산물 브랜드 소비자 패널 조사</b> , 충남 쌀 생산·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품목별 수출협의회 구성, <b>지역 농수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b> , 지역 농수산물품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
⑤농어촌혁신	농어촌산업(11)	<b>충남 6차산업 역량강화 사업, 농어촌산업경영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b> , 충남 6차산업 역량강화 사업, 농촌체험학습장 통합관리 시스템 및 체험시설 표준화 모델 구축,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공간 확산 사업, 농산촌관광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강화 사업, <b>전통식품화 보급과 충남 전통농산물 인증제 도입</b> ,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및 소규모 가공농가 육성,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내실화, <b>한국전통주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b> , 윗 생산기반 확충 및 인력양성 사업
	농어촌마을(5)	<b>희망마을 3.0 융복합 공모사업, 광역 마을만들기 전문사업단 육성, 광역 및 기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b> , 농식품부의 시군 지역 역량강화사업 적극 활용, 어촌마을 폐자원을 활용한 경관정비

자료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주 : 64개 사업 가운데 밑줄 굵은 색 사업은 25대 핵심전략사업임.

### 3) 충청남도: 3농정책 방향

○ 충청남도는 민선 7기를 맞아 그동안 민선 5-6기 동안 실시해왔던 3농혁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3농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 5대 혁신 전략, 18대 전략과제, 100개 중점사업을 제시함

#### ○ 3농정책의 비전

-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 ○ 3농정책의 3대 목표

- 농어업인: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 농어업: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산업기반 구축

- 농어촌: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 ○ 3농정책의 방향

- 하드파워, 행정주도 → 소프트파워, 협치농정

- 대외경쟁력 중심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외부 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 생산기반 위주 → 가공·유통·마케팅

#### ○ 3농정책의 5대 혁신 전략

- 농정혁신: 참여지향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 생산혁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 구축

- 유통혁신: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를 통해 농산물 매출 1조원 달성

- 기술혁신: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농촌혁신: 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

#### ○ 5대 혁신, 18대 전략, 100대 중점 과제

[표 11] 3농정책 5대혁신, 18대 전략과제, 100대 중점 과제

5대 혁신	18대 전략과제	100대 중점 과제
① 농정혁신	1)민관협력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1.3농정책위원회 및 3농정책 포럼 운영, 2.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3.농협과 함께하는 정책협력모델 구축, 4.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육성
	2)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삶의 질 향상	5.농촌복지정책 확대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6.여성농업인 육성 정책강화, 7.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 확대추진
	3)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8.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 9.3농정책 현장·전략 수요 발굴, 10.3농정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② 인력혁신	4)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	11.농산물생산안정지원, 12.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13.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 14.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 15.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16.우리밀 생산 인프라 확대, 17.친환경농업 후계 인력육성, 18.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19.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지원, 20.스마트 선도농업 확산, 21.인산 세계화 전략적 육성
	5)술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22.전문임업인 육성 지원, 23.바이오 임업 육성(역점), 24.밀원수 조성, 25.치유의 숲 조성 및 생태마을 확대(역점), 26.경계성 있는 산림조성으로 자원화 확충, 27.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 28.미세먼지 저감 생활속 도시숲 확충, 29.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공약)
	6)자연 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30.해군우농가 중심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공약), 31.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공약), 32.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공약), 33.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공약), 34.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공약), 35.양질 조사로 생산·이용 기반 확대, 36.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협소 사육기반 구축
	7)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	37.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38.소(牛)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39.구제역 백신항체가 체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 40.거점 세척소독시설 구축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 41.방역실내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 42.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3.축산물 안전성 제고, 44.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

# 04 충남도 미래 농정과제

	8)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45.인공어초 설치 및 수산종묘 방류, 46.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47.어선감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48.서해안 특산물중(대하, 꽃게) 자원조성, 49.종어 자원복원 및 양식기술 보급, 50.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51.우랑김 생산 지원(공약), 52.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역점), 53.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54.수산업 경영인 육성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역점)
	9)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	55.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공약), 56.수산물 산지공시시설 지원(역점), 57.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역점), 58.수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역점), 59.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역점), 60.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역점), 61.선도 모범 어촌체험마을 육성(역점), 62.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활성화(역점)
③ 먹거리 혁신	10)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	63.공동선별 생산자조직 육성(공약), 64.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공약), 65.충남오감 연합마케팅 활성화(공약), 66.충남오감 통합물류·통합구매 안정 정착(공약), 67.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
	11)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68.푸드플랜수립 및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공약), 69.충남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공약), 70.전체 학교(유·초·중·고·특수) 무상급식 지원(공약), 71.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공약), 72.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공약)
	12)로컬푸드(직거래)·온라인 소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	73.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지원, 74.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75.인터넷 소핑몰 「농사랑」 운영활성화, 76.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77.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④ 유통혁신	13)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78.신품종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역점), 79.실용기술 개발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해결, 80.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농업 구현, 81.ICT활용한 정밀스마트농업 선도, 82.농민참여형 연구 확대 및 신기술 조기확산
	14)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 향상	83.농촌자원 융복합 소득화와 부가가치 향상(역점), 84.농업·농촌의 기능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85.농업·농촌 미래인재 청년 농업인 육성, 86.농기경영역량 향상과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 87.미래농업 전문인력 농업인교육 강화(역점), 88.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공약)
⑤ 농어촌 혁신	15)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공동체	89.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0.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91.농촌 현장포럼 및 마을 역량강화, 92.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3.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16)안전하고 편리한 농업농촌 기반구축	94.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95.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17)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96.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공약), 97.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98.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
	18)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99.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경관개선, 100.충남형 도농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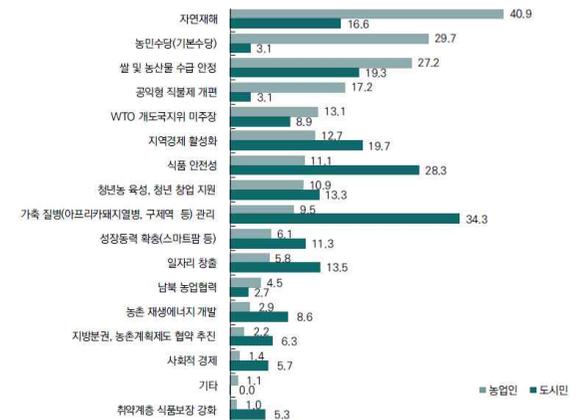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3농정책 100시책 관리계획

## 1. 미래 농정과제의 기본 방향7)

○ 첫째, 기존 농산업 방식에서 탈피해 생명을 살리는 생태문명건설로 전환

-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적 전환의 핵심 주제로 인식
-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 석유시대의 종말로 인한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될 것임

7) 미래 농정과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 <그림 7>을 일부 참조함



<그림 7>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중복응답, %) 자료: 자료: 이정민 등,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85호

- 따라서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시대의 핵심의제로 생태문명건설 설정이 필요함

○ 둘째, 안전한 농업인, 안심하는 소비자 등 사회신뢰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성 보장

- 오늘날 농업과 농촌은 기후위기와 각종 재해재난으로 위협을 받고 있음. 농업인은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와 과도한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가격 폭락의 위협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농업인은 각종 전염병 등으로 영농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농작업 과정에서의 각종 사고 등으로 항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반면,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의 심한 등락과 불안정한 농산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시기에 농산물 가격의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인은 기후위기,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계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체계 구축

- 불평등문제가 전 세계적인 핵심 의제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정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과 효율 위주의 정책으로 소수 규모화농, 전업농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 농업인은 농정에서 배제되는 기존의 농정에는 심각한 결함이 돌출되고 있음
- 농업보조금, 직불제에서도 규모화농, 전업농에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농가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악화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 있음
- 따라서 승자독식의 농정이 아니라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처럼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넷째,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합리적 영농체계 구축

-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영농은 미래 영농에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소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래 영농기술의 도입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은 현실 여건에 비해 시설과 자본의 과잉 투자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됨.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소농의 영농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높음<sup>8)</sup>

8) 이명기(2019)는 현정부의 스마트팜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농업 분야의 기술 도입 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하고, 둘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영세한 경영규모와 농업 기반 조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보급이 더디고, 셋째,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는 인력과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넷째, 선진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수요에 의한 제한된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정책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함

-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자본은 중소농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합리적인 영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미래 영농세대의 육성과 통일시대의 농업의 준비

- 지속가능한 미래 농정의 핵심은 영농후계인력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후계인력을 단순히 청년농업인으로 등치시킬 필요는 없음. 물론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많이 유입되면 좋지만 현실 여건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임
-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베이비부세대의 은퇴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중장년층의 은퇴가 높아지고 있음. 이들은 사회에서의 기술과 네트워크, 개인적 역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농촌 유입은 농업과 농촌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후계인력 육성에서 청년농업인정책 이외 중장년층의 농촌 유입을 위한 여러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농업교류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12] 충남도 미래 농정과제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	구체적 방향
① 기존 농산업 방식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태문명건설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업농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생태농업 구현</li> <li>■ 농업·농촌을 생태문명건설의 핵심 의제로 인식</li> <li>■ 기후위기, 석유시대 종말을 대비한 새로운 영농체계 구축</li> </ul>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신뢰 농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재해와 재난에 안전한 농업 보장체계 마련</li> <li>■ 농작업의 위험과 각종 질병에 안전한 안전장치 마련</li> </ul>



<그림 8>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자료: 이명기(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관리체계 구축</li> </ul>
③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평등이 농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li> <li>■ 직불제, 각종 보조금 등에 균등한 혜택 체계 마련</li> <li>■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혜택의 보조금 지급</li> </ul>
④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합리적 영농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영농 등은 피할 수 없는 대세</li> <li>■ 무리한 기술도입과 과잉 투자는 오히려 역효과 초래</li> <li>■ 우리 영농규모와 풍토에 맞는 합리적 영농방식 개발</li> </ul>
⑤ 미래 영농세대의 육성과 통일시대의 농업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감소로 인한 퇴직자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 유도</li> <li>■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 유도</li> <li>■ 통일농업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교류 추진</li> </ul>

## 2. 미래 농정과제

### ○ 첫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보장

- 과제1: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 과제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의무화 및 지원 확대
- 과제3: 농산물 가격안정제(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확대 도입

### ○ 둘째,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 과제1: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제 도입 및 확대
- 과제2: 공익형 직불제 확대
- 과제3: 농촌기본소득제·농촌수당제 도입

### ○ 셋째, 농지는 농민에게, 농지제도의 원칙성 명확화

- 과제1: 비농민의 농지 소유 제한(투기 농지 강제 처분)
- 과제2: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 과제3: 청년농업인 등 신규 농민에게 장기 무상 농지 임대

### ○ 넷째,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 과제1: 친환경농산물의 농촌마을 공공급식 확대
- 과제2: 대학생 친환경급식 지원
- 과제3: GMO의 완전표시제 및 non-GMO 공공급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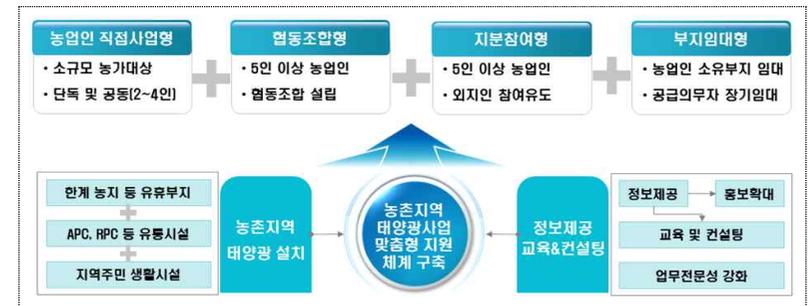
### ○ 다섯째,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합리적 영농방식 구축

- 과제1: 중소영세농을 위한 스마트영농기술 보급
- 과제2: 중소형 첨단 영농기계의 공유 및 대여사업 확대
- 과제3: 첨단영농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확대

### ○ 여섯째,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자립 확대

- 과제1: 축분의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경축순환농업체계 구축
- 과제2: 태양광을 활용한 농가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보장<sup>9)</sup>
- 과제3: 풍력, 지력, 조력 등 자연에너지의 농업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9) 농촌 태양광 추진 유형 및 지원체계 구상은 다음 <그림 9>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농촌 태양광 추진 유형 및 지원체계 구상

자료: 김종인(2019),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농촌태양광, <농정연구>제72호(겨울호).

○ 일곱째, 들봄과 나눔을 통한 농촌사회안정망 강화

- 과제1: 농촌노인 공동생활제 확대
- 과제2: 공공조달체계를 통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 과제3: 의료소외 농촌지역 원격의료 진료

○ 여덟째, 미래 영농세대 육성 및 통일농업 준비

- 과제1: 명퇴자, 은퇴자의 농업·농촌 재취업 확대
- 과제2: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증진 플랫폼 구축
- 과제3: 교류지역 지정(예: 황해남도)을 통한 지속적인 남북농업교류 추진

### 3. 결론 및 함의

- 미래 농정은 낙관과 비관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의 미래는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임. 따라서 충남도가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에너지와 농자재 자급률도 매우 낮은 상태임.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석유시대의 종말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에 대한 대안들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음. 왜냐하면 인간은 안 먹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 같은 경우 ‘농업에 미래가 있고 농업에 투자하라’고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영농방식은 서양의 영농방식과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의 생활방식과 풍토에 맞는 영농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농업·농촌·농민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서구의 영농방식의 변화를 참고로 하되 동아시아지역에 적합한 미래 영농체계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함. 충남도가 이러한 미래농정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

### 참고자료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안. 2019.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농촌태양광. <농정연구>제72호(겨울호).

김종철. 2020. 기후위기, EROEI, 농민기본소득. <녹색평론>제170호(2020년 1-2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2019. 공익형 직불제가 가야할 길.

박경철. 2019.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후 우리의 과제. (가칭) 유엔 농민권리선언포럼 발족식 발표자료

박경철·한승석. 2019.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박영숙, 제롬 글렌. 2017.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교보문고.

박영숙, 제롬 글렌(이희령 옮김). 2017. 일자리 혁명 2030: 제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킬 업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이명기. 2019. 농업의 스마트화: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중심으로. <농정연구>제72호(겨울호).

이명기 외. 2017.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외. 2019.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85호. (가칭)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발족식(2019. 3. 20) 자료집.

캐롤라인 듀잉, 팀 존스(노규성, 안종배 옮김). 2019. 미래예측 2030: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예측. 광문각.

충남도. 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사업.

충남도. 2019. 3농혁신 2030발전계획 연구.

충남도의회. 2019.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1)

황영모. 2019.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의 실행과제. <농정연구>제72호(겨울호).

작성자: 박경철 책임연구원

kcpcark@cni.re.kr